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 : 이미현 010-9068-5132 pp@pspd.org, 서민영 010-2423-9454 civic21@civilnet.net)
제 목 [보도자료]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25. 7. 22. (총 10 쪽)

보도자료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규탄 기자회견

부당한 관세 무기화 거부하고, 투명하게 협상 내용 공개해야

일시 장소 : 25. 7. 22. (화) 10:00,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무역과 안보 영역에서 동맹국들을 포함해 무역 상대국들에 관세 및 미군 주둔비 증액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14개국에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25~40%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지함.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는 국제무역 통상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부당 행위임.
- 국내 기업들 대다수가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가격경쟁력 하락 외에도 일부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임.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쇠고기 수입 월령 30개월 확대, 과일류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승인 절차 단축과 더불어 국민의 주식인 쌀 관세에 대한 불공정까지 운운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민 생존, 국내 농업 기반까지 담보로 하는 것으로 우려스러움. 안보 분야에서도 압박은 이어지고 있음. 한국은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는 이미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한 바 있음. 이 합의를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현재보다 9배나 많은 분담금을 내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응해서는 안 됨.

-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 없는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됨. 미국과의 통상 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국민 동의에 기초해야 함.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 협상부터 진행해야 함.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대한 일방적 양보는 국민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7. 22. 화 10: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미 대사관 건너)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언3.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김상기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 발언5. 서아론 (GCN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서민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발언문

미국은 부당한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중단하라!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부당한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5%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관세 무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고 국제무역 통상 규범과 질서를 흔드는 더 이상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자동차,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 달한다.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도 거세다. 농축산물 장벽 완화 요구라던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그 범위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농축산 분야 검역 및 수입 제한 조치 철폐 요구는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 최근 한국 측 협상 담당자의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쇠고기 수입 월령 30개월 확대, 과일류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승인 절차 단축 등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그럼에도 또 다시 쇠고기 수입 확대를 포함해 여러 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라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안전권을 포기하고 농민생존, 국내 농업 기반까지 담보로 한 협상결과로는 그 어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통상협상에서 정부는 항상 농민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 왔다. 더 이상 국민 먹거리 안전을 담보로 통상협상을 강행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안보 영역에서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을 ‘현금인출기(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며 “부유한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매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수를 4만 5천 명이라고 부풀려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또한 한미는 이미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이 합의를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현재보다 9배 가까운 분담금을 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응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 없는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 협상부터 진행해야 마땅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민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만큼 국민 앞에 소상히 협상 조건과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코자 한다면 대미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자율적 다자협력 외교로 나아가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FTA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연결된 연비와 안전기준을 양보했고, 비밀협상을 통해 미 쇠고기까지 추가 개방한 바 있다. 그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외면한 굴욕협상, 밀실협상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다시는 이러한 우를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미국은 강압적이고 부당한 관세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 근거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어림없다. 미국은 군사비 증액 압박 중단하라!
- 국민 먹거리 안전, 식량 주권 양보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권, 생존권 지켜내라!
- 국민동의 없는 한미협상은 무효다. 한국 정부는 대미 협상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5. 7. 2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동

▣ 붙임문서2. 발언문

발언1. 윤복남 민변 회장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며 압박하는 방식은, 외교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 신뢰에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신중하고 원칙적인 태도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통상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에는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우리 산업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 이외에도 농가 생계 곤란, 소비자 부담, 더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보 문제를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위비 분담 이슈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은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세금 및 용역비 감면 등 비재정적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외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계속 증액시켜 왔으며, 올해만 해도 그 규모는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비재정적 기여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3조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부풀려 한국에게 더 큰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당한 압박입니다.

지금 시기 우리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 철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의 통제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면, 이는 헌법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협상은 국민적 동의와 충분한 국내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전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밀실에서 성급히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국민들과 함께 국익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국민의 생존권이고, 민주적 절차이며, 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관세 인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통해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안보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 하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전가 요구가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분명 무리한 면이 있지만, 자국 중심 외교라는 점에서 예고된 흐름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와 소통의 방식에 있다. 현 정부는 이미 유사한 압박을 경험한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교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성 확보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군사비 압박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특히 수출기업과 환율 안정성, 대외 신인도 등—에 관한 우려를 안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이 미국 관세 정책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고용과 투자에까지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국방예산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정과제 추진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정권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여론과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선제적 대응이나 정보 공개, 공론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대국민 설명이나 국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비공개 외교 채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을 키우고 있다.

현재 사안은 단순히 양국 간 외교적 협상 수준을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이다. 미국의 요구는 일회성 협상 의제가 아니라 향후 한미 동맹 관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외교부나

국방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경제부처, 산업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범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체적 협상 내용이나 대응 기조를 국민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 및 산업계와의 논의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조율과 통합적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적 협상과 경제적 대응, 안보적 고려가 따로 놓고 있어서는 미국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폐쇄적 접근은 자칫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정책 추진력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회적 반발과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과거 한미 FTA 협상,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협상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투명성 부족은 협상력 자체를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협상 전략은 상대방에게도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밀실 협상은 오히려 협상 카드를 제한하고 상대방의 압박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투명하고 구체적 대응 논리 공유

-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단순히 '압박'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효적 대응 논리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서, 정부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어떤 선에서 타협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사전에 시민사회와 공유되어야 한다.

2. 통합적 국가전략 차원의 접근

- 관세와 군사비 문제를 외교·통상·국방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에 맞는 정책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정기적 점검과 조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안보와 전통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현 상황에서는 부처별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제도화된 소통 시스템 구축

- 관련 정보의 공개,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 국회 보고 등을 포함한 소통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구체적으로 정기적 국정감사와 별도로 특별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상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브리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권 초기일수록 국민과의 신뢰 구축이 절실하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구축된 소통 방식과 투명성 수준이 향후 정부 운영 전반의 기초를 결정하게 된다. 그 첫걸음은 민감한 대외 현안에 대한 정직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노력이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을 정책 결정 과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은 상대국의 전략이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준비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외 정책의 성공은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의 설득력은 논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 정책이라도, 그것이 시민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민과 함께 판단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만 정부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지금 이 시점이다. 한미 관계라는 한국 외교의 핵심 축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단순히 외교적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과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투명하고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발언3.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트럼프가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8월 1일까지 10여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한국 상품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지 하루만에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면, 매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통상 협상을 묶어서 일괄타결하겠다는 속셈인데, 터무니 없는 강요이고, 무역 통상 규범과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과장과 거짓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한국이 이미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데도, 미국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 수마저 부풀리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 11월, 내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이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보다 9배 가까운 분담금을 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억지 주장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리라고도 합니다. 우리 국방비는 우리 국민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미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왜곡된 주장, 선 넘는 주장으로 관세 협상과 연계해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미관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민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고, 주권자 국민들은 협상의 조건과 내용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무엇보다 당사자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발언4. 서아론 GCN녹색소비자연대 국장

트럼프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 부분에서 쌀의 관세 인하와 과일류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 농산물의 승인 절차 단축과 같은 내용들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와 소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값 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농산물 수입의 승인 절차가 단축되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단기적인 상황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시야입니다.

쌀과 같이 주식으로 하는 농산물이 관세 없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당장은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사라지게 된다면,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농산물이 값싸게 공급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수입선을 다변화 시킨다는 것도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식량위기가 찾아오면 그 때는 어떻게 대응 하겠습니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농산물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식량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지켜봤습니다. 멕시코에서 무역 장벽이 제거되면서 200만명 이상의 농민 생계가 붕괴되고 식품 가격이 단기에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곡물 가격 상승과 글로벌 가격 변동에 노출되어 소비자 물가가 불안정해졌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쌀 관세화법의 시행으로 민간 기업의 쌀 수입을 허용하자 값싼 수입쌀이 유입되었고,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국제 쌀 가격이 상승할 때 국내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겪으며, 필리핀 정부는 식량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아이티나 이집트에서 자국의 식량 생산이 붕괴된 이후 빈곤의 증가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위험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내몰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과일류 검역 간소화나 LMO농산물의 승인 절차 단축과 같은 요구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 시키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GAP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전한 농산물이라며 이러한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간소화하고 승인 절차를 단축시킨다면 소비자를 대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상반되는것 아닙니까? 안전한 먹거리에 민감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요구합니다. 관세를 무기화 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의 물가도 상승시킬 것이고 미국 경제도 침체를 겪게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보이는 이득에 눈이 멀어 공멸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협상에 쉽게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특히 가격의 소비탄력성이 낮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 분야가 쉽게 협상의 자리에 올리지 않길 요구합니다.